

국회 원 구성 협상 또 결렬... “오늘 본회의 강행” vs “협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 “오늘 넘기는 일 없을 것”
국힘 “일방적 국회 운영” 비판
상임위 구성 필요성에는 공감



한병도(왼쪽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하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협상을 한 뒤 굳은 표정으로 각각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9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또 결렬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직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야 2+2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양보)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내일까지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해 일을 못한다면 국민 빛이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결심이 섰다. 의장에게 국회를 열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원 구성 관련될 것을 즉각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내일은 국회 마비 상태를 종식하고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꼭 본회의가 소집돼, 국회의장이 상정한 상임위 명단에 기초해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전히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

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못한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해서 결국은 결렬됐다”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강행하려면

(18개) 다 가져가라고까지 선언을 했다”며 “국회 내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장께서는 내일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으시도록 간곡히 말씀드립니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나란히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어 국민들께 불면목이 없다”며 “지난 한 달간 민주당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신속한 원 구성 합의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으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말을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주장은 원 구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국회를 공전시키려는 지연 전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직무대행은 “더 이상 국민의힘 뭉치를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기어코 민생 파업을 선언한다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해 오늘 오후부터 의원님들 모두 비상대기해 주시길 바란다. 내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6월 내에 반드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까지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협상 진행 상황을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규정하며 법사위원장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무슨 염치로 가져가겠다는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마무리하고 상임위원 명단을 짜는 것이 당연한 일의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식 의장과 민주당은 상임위 명단부터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당의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또다시 장악하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 범죄 세탁, 공소 취소 완성을 위한 것 아니겠나”라며 “자신들의 권력에 복종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각종 악법을 브레이크 없이 국회에서 찍겠다는 것 아닌가. 이를 막기 위해 야당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 관습법에 따라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반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를 강행하는 위헌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두고 與 “지역차별” vs 野 “관치 개입”

민주, 균형발전·정책 필요성 강조
국힘, 절차적 공정성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망상적 의식에 내재된 지역 차별주의도 점점 노골적으로 표출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관치 개입”이라며 결정 과정에서의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에 대해 “반도체 산업 변명과 성장, 5·3특이단 국가 균형발전 맞물린 중차대한 과제인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야 되겠나”라며 “국가 경쟁력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정부가) 오늘 국민과 지역 모두 납득할 청사진을 제시할 거라 보며 좌고우면(左顧右盼)하지 않고 최

선 결과 위해 나아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서도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충청의 데이터센터, 영남의 피지컬 인공지능(AI) 육성 및 첨단산업 유치 등 국가 균형성장의 시대적 사명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호남 특혜식 주장은 자신들의 사고 회로 속에 호남 지역에 대한 본능적 차별의식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로지 지역을 갈라치는 생각 외에는 고차원적 담론 하나 없는 정당이란 점은 부끄러워해야 할 수치”라며 “호남을 지원하면 정치도박이고, 영남을 지원해야 균형발전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이번 투자 계획은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과 정책의 신뢰성을 점진적으로 확

보한 데서 발휘된 결과”라며 “그릇된 정치 망상과 지역 차별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망국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가)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라고 말했다”며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임과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것을 반대하

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전국 모든 지역이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경쟁하는 2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광주전남으로 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왜 광주전남으로 가야 하는지, 국가 백년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입지를 결정했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어디로 가겠다는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결정주체를 추궁하며 사견을 전제로 “왜 이것을 정부가 결정했는지를 두고 반드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

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호남도 대한민국이고, 호남의 청년에게도 세계 최고 산업에 도전해야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호남이기 때문에 된다는 말은 충분하지 않다. 반도체 투자는 선물이 아니라 전략, 정치적 배려가 아니라 산업적 필연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에 투자하더라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과 조기 가동이 먼저”라며 “기후, 화성, 평택, 이천, 청주, 용인에 있는 기존의 초격차 생태계가 흔들리면 호남도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호남은 가뭄도 잦다”며 “군 공항 부지에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나갈지, 여기에 언제 반도체 공장을 만들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李 대통령 국정지지도 46.5%... 6주 연속 하락

금·부정 오차범위 접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46.5%, 잘못한다는 평가는 49.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묻은 결과, 46.5%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

다’는 응답률은 49.5%였다. 4.0%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 주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0.2%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5월 둘째 주 60.5%를 기록한 뒤 6주 연속 하락했다.

‘잘못한다’는 부정 응답은 지난 주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부정 응답률이 긍정 응답률을 앞섰다.

권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

정 평가 응답률은 제주 74.1%, 광주·전라 73.1%, 대전·세종·충청 49.9%, 인천·경기 46.4%, 부산·울산·경남 43.2%, 서울 40.0%, 대구·경북 34.3%, 강원 33.9%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

李, 내달 1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

정부 정책 관련 입법 과제 논의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만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달 1일 한 직무대행과 원내부대표들을 초청해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7월 임시

국회, 더 넓게는 9월 정기국회 등을 앞두고 이뤄지며 정부 정책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달 3일 서울 모처에서 하반기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의원 워크숍’을 진행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달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처음이다.

/사예진 기자